

나주시청 직원 연쇄 감염, 방심이 화근

송파구 365번 접촉 유증상 발현에도 격리조치 無 “보건소장, 간부회의때 보고 안해...골든타임 놓쳐”

공무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 확진으로 비상이 걸린 전남 나주시청의 경우 첫 번째 감염자가 유증상을 호소했을 때 자가 격리 조치만 잘 했어도 감염증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나주시청 공무원 2명이 전날 확진된 가운데 나머지 본청 직원 등 800여명에 대한 검사 결과 발표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추가 확진자 발생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나주시청에선 서울 송파구 365번과 지난 14일 나주 다도면의 한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동선이 겹친 일 자리경제과 A팀장(전남182번)이 지난 26일 오전 0시30분 확진된 데 이어 같은 부서 동료직원 B씨(전남183번)도 이날 오후 6시에 확진돼 강건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전남지역 지자체에서 공무원 연쇄 확진은 영암군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 꼽힌다.

문제는 나주시의 경우 충분히 감염증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데 있다.

첫 번째로 확진된 A팀장의 경우 지난 14일 송파구 365번과 동선이 겹쳐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17일 실시한 1차 검사에선 음성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이틀 간 고열과 근육통

증상 발현으로 24일 실시한 2차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진돼 전남대 빛고을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나주시보건소는 A팀장의 1차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유증상 발현 사실을 간부회의 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간부회의 때 제대로 보고를 해 줬다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1차 검사에 음성이 나왔어도 A팀장을 자가 격리 조치했을 테고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탄식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능동감시자에 대한 자가 격리 결정은 (나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며 “당시 전남도 역학조사관의 지시에 따라 격리조치를 하지 않게 됐다”고 항변했다. 문제는 또 있다.

A팀장도 1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내역과 유증상 발현 사실을 본인 이 속한 부서장에게조차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느슨해진 감염증 대응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같이 느슨해진 감염증 대응 속에 A팀장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공개된 A팀장의 동선만 하더라도 지난 19일 일자리경제과 주관으로 열린 ‘나주목사고을 시장 개장 8주



26일 전남 나주시청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나주시청사가 임시폐쇄된 가운데 직원들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년 행사에 참석해 담당 업무를 쟁겼다. 지난 22일에는 읍·면·동 직원 50여명이 참여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회의에도 참석했다.

19일 오전 목사고을 시장 행사 이후에는 강인규 나주시장 주최로 열린 ‘일자리경제과 직원 격려 오찬’ 자리에도 함께 참석했다.

A팀장과 접촉 이후 26일 오후 확진된 같은 부서 직원 B씨는 이날 점심식사 자리에 참석한 이후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강 시장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내달 2일까지 일주일 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서선욱기자

‘왜 무시해’ 지인 흥기로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흥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 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황들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가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 유족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으로 미뤄 엄벌이 필요하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1시50분께 광주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61·여)씨를 흥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등산로에서 음독 상태로 발견됐으며, 병원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다.

1심은 “피해 여성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흥기를 휘둘렀다. 다중이 있는 식당에서 범행했다.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행정명령 어기고 대면 예배 강행한 목사 벌금형

행정명령을 어기고 50인 이상 집합·대면 예배를 강행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7)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 모 교회 담임 목사인 A씨는 7월 8일 오후 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교회에서 198명이 모인 가운데 예배를 치러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기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종교 활동 등이 금지됐다.

재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생면부지 여아 “사랑한다”며 께안고 입맞춤한 50대 집유

여자 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각 40시간의 성폭력·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9시30분께 전남 한 지역 아파트 복도에서 12살 여아를 뒤따라가 양 팔로 께안고 머리에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부를 잘 하느냐’는 말을 듣고 멈춰선 아동을 추행한 뒤 ‘사랑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놀라서 집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에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말까지 해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피해자는 굉장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가정·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등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입맞춤한 신체 부위가 성적으로 가장 민감한 곳으로부터는 다소 비켜나 있는 부분인 점, 동종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이사회 계획을 담은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사회 내에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화장실 방범창 뜯고 피조사자 도주...광산경찰 허술한 보안 도마 위

러시아 불법체류자 조사 도중 화장실서 달아나

광주 광산경찰서 통합수사팀직실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났다가 3시간 만에 붙잡혔다.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통합수사팀직실에서 도주 사건이 발생해 허술한 보안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26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7시27분께 청사 본

관 1층 통합수사팀직실(이하 당직실)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던 러시아 국적 불법체류자 A(29)씨가 달아났다.

A씨는 당직실 내 화장실의 방범창 창문을 뜯고 도망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3분 뒤 도주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동선을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통해 파악, 광산구 한 빈

집에 숨어있는 A씨를 3시간 만에 붙잡았다.

경찰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A씨가 차고 있던 수갑을 풀어준 뒤 화장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체포된 용의자의 호송·조사 동선을 단일화(호송 차고지 연계)해 도주를 원천 차단한다’는 당직실의 설립·운영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수갑을 풀어준 뒤 감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A씨가 손쉽게 도주해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들어갔던 칸의 창문만 제대로 보안을 안 돼 있는 상태였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모델에서 여자친구와 싸우던 중 객실 내부에 음료 등을 뿌려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됐다.

김미희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